



# 경북 지역 농협 개혁운동의 성과와 전망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 1. 들어가며

작년 11월 말 경북 천북농협에서 시작된 농협 개혁운동의 물결이, 경북 지역을 넘어 경기도와 강원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작년 겨울부터 올봄까지 끈질기게 진행된 경북 지역의 농협 개혁운동은 농업계 내외부의 우려와는 달리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해결되었다. 조합장 및 전상무 등 고위 임직원들의 불합리한 급여 체계가 개선되었고, 상호금융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합의로 순조롭게 이뤄졌다. 최근 구미 장천농협과 파주 교하농협의 해산 등 일부 지역에서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농협 노조와 일반 직원과의 현안들은 큰 탈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이번 농협 개혁운동의 결과 농협중앙회가 4월 13일 826개 조합에 대해 일괄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키로 발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은 4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경북 지역의 군위군, 청도군, 칠곡

군 지역의 농협 개혁운동 사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한농연 일선 회원들의 농협 개혁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번 『월간 한농연』은 4.15 총선 이후 농협 개혁운동의 바람직한 방향 및 실천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경북 지역 농협 개혁운동의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2. 경북 지역 농협 개혁운동의 핵심 쟁점

### (1) 불합리한 임직원 급여 체계 및 직무편제

이번 경북 지역 농협 개혁운동의 시발점이 된 핵심 쟁점은 무엇보다도 조합장 및 임직원들의 불합리한 급여 체계와 과도한 급여 및 경비 지급에 있었다. 그간 지역농축협들은 농협중앙회의 지침에 따라, 본봉보다는 상여금·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 위주로 임금 체계가 짜여져 방만하게 운영되었다. 그 결과 노동생산성에 비해 과도하게 인건비를 높게 되어 농협 건전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또한 각종 인건비성 경비와 판공비

농협 개혁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조합장 및 임직원들의 불합리한 급여 체계와 과도한 인건비 지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농민조합원들의 영농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상호금융 대출 금리 문제도

핵심 사안으로 제기됐다. 한국 농협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농민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 속에서 농촌 지역을 뒤흔드는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등의 방만한 지출도 조합원들의 불만사항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직원 직책편제·업무분장의 불합리성은 더 큰 문제다. 간부 직원 위주의 '역피라미드식 직책 구조' 고착화에 대해 조합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일례로 군위군의 우보농협은, 간부 직원은 2급 전무 1명, 3급 상무 1명, 4급 2명 등 간부직원만 4명이다. 일반직원은 5급 4명, 6급 2명 기술 기능직 2명, 비정규직 1명이다. 이 경우 과장 이상 간부직원의 비율이 30.8%에 이르러, 실제 현장에

서 뛰어야 할 경제·지도 실무직원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농협 내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는데, 농자재 판매 업무 등 단순 업무에 간부 직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신용사업 창구 여직원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 (2) 상호금융 대출금리 문제

농가부채 누적과 농촌 경제의 전반적인 악화로

### ● 우보농협 2003년 정원표 및 조정전 급여 수준

직 책	구분	인원(명)	총 급여수준(국세청 신고 기준)
조합장		1명	72,574,000
전무	2급	1명	76,918,000
상무	3급	1명	65,455,000
과장	4급	2명	61,771,000(과장1) / 59,427,000(과장2)
계장	5급	3명	29,886,000(계장1) / 28,227,000(계장2)
주임	6급	3명	23,033,000(주임1) / 21,033,000(주임2)
기술직	기능직 직원(운전자)	2명	51,640,000(기능직1) / 39,513,000(기능직2)
특수업무직	비정규직(계약직)직원	2명	11,952,000(계약직1)

※ 주 : 총 급여수준 항목은 급여 내역이 공개된 직원 중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였음

※ 자료 : 한농연군위군연합회 제공

인해 현재 농협의 상호금융 금리 운용체계는 농민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예컨대 상호금융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프라임레이트에서 농민조합원들은 신용점수가 낮아(90점 만점 중 최고 60점) 최소 2% 이상의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공무원·봉급생활자·자영업자들은 비교적 신용 점수가 높아(최저 80점대) 가산금리를 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우대 감산금리까지 적용받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정부의 농업금융 정책을 통해 기준금리를 8% 선까지 내린다 하더라도 농민들은 최소 10% 이상의 금리 부담에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상황이 연체될 경우 20%가 넘는 연체 금리까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농민들의 금융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지역 농축협들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북 지역 일선 회원들은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 (3) 농협 경영 관련 기초 정보의 공개 미흡

조사 대상 지역의 한농연 회원들은 대부분 회원 농축협 경영 관련 기초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군위군 우보농협의 경우, 대의원총회를 통해 예정산 상세부속서가 공개되지 않아 애를 먹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민감한 사안인 임직원 임금 관련 자료 제출 문제는 더욱 그러했다. 개혁운동 및 협상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집요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여야 농협은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개혁 과제 논의에서조차 임금 삭감분 보전을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급여 지출항목을 변경하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회원들은 언급하였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농협 개혁

운동 과정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노령 조합원들마저도 조합장 및 임직원의 불합리한 급여 체계와 임금 수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이는 농협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조합원 집회를 통해 표출되었다.

아울러 조사 대상 대부분의 농협들의 경영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농민조합원들의 불신 증폭의 원인이 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일선의 한농연 회원들은 한결같이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없이는 향후 2~3년 이후에는 임금 및 금리가 현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4) 조합장의 정치적 야심 충족을 위한 농협 경영

또한 조합장들의 정치적 야심 충족과 농협중앙회 경영 평가만을 염두에 둔 불합리한 농축협 경영 관행도 농협 개혁운동의 도마 위에 올랐다. 조합장은 경제·지도사업 활성화 등 농협 건전경영 및 조합원 지원 강화를 위한 핵심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지역의 조합장들 중 일부는 재선 및 지방의원 진출 등을 노린 실적쌓기용 사업 집행 및 선심성 환원사업만 벌이고 있다. 또 조합 내 잉여금을 농협중앙회에 예치시키는 등 안정적인 수입처 확보에만 집중하여, 농축산물 가공·유통활성화에는 소홀하여 농민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 3. 경북 지역 농협 개혁운동의 성과

### (1) 농협 조합장 및 임직원 급여 조정

각 지역농협별로 조합장 및 임직원의 급여 조

정이 이뤄졌다. 조합장의 연간 급여 및 판공비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상한이 설정되었으며, 전상무의 급여 및 각종 수당·경비가 조합장의 급여 수준을 넘지 못하는 선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협 책임 경영을 위한 전상무의 역할과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계약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일반 직원들은 간부 직원들의 급여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소폭의 급여 조정이 이뤄졌다.

주목할 점은, 불합리한 급여 및 각종 수당·경비 지급 관행에 대한 농민조합원들의 대응에 있다. 단순히 급여 인하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급여 체계 속에서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고 있었던 각종 수당·경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보건단련비나 인센티브 상여금, 연월차수당 조정,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중단, 경조사금 지원 중단, 체육대회 및 노동자의 날 행사 비용, 지나치게 높은 중식비의 조정 등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또한 일선 한농연 회원들은 사후적인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일선에서 뛰어야 할 일반 직원들의 인하폭을 최소화하고 노조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미 장천농협의 해산 사태는 농민조합원들과 농협 노조원들의 경각심을 높여내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이기는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농민조합원과 노조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청도군 및 칠곡군에서는 조합장 및 전상무와는 달리 각종 경비 및 수당 인하폭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노조원과 일반직원들의 신뢰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여, 원만한 타협과 농협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 (2) 상호금융 대출 금리 인하

상호금융 금리는 대체로 개별 농협들의 프라임 레이트를 기준으로 2% 정도를 인하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조합장 및 전상무 등의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억제하여,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투입하여 상호금융 대출 금리 인하를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

### ● 농협 급여조정 이후 자원 투입 계획

농협별 구분	자원 투입 계획
칠곡 가산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및 지도사업 부문 강화</li> <li>- 영농지도역을 확보하여, 생산 및 유통사업을 활성화</li> <li>- 작목반 지원 체계를 강화</li> </ul>
청도 회양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사업 환원 : 5천만원 추가 투입</li> <li>- 농업인 안전공제 전 조합원 무상가입 : 1,200만원</li> <li>-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 1,200만원</li> <li>- 조합원 주민세 납부 : 5백만원 등</li> <li>- 액비제조기 구입, 과수인공수분기구 도입 등은 추후 논의</li> </ul>

물론 금리 인하시 각 농협별 예대마진이나 예대비용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경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농협의 주요한 수익원인 신용사업의 현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만한 농협 경영 관행을 일부라도 개선할 경우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재원 여력이 마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급여 조정을 통한 대출 금리 인하의 의의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실제 청도군에서 농협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박인상 금천면회장은 “조합장 및 전상무의 급여 조정을 통해 개별 조합별로 최고 2억원 씩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합치면 전국 농협별로 약 4천억원의 재원 마련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1년간 농협중앙회 전체 당기순이익에 맞먹는 경영 개선 효과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 (3) 농민조합원의 농협 경영 참여 확대

이번 농협 개혁운동을 통해 경북 지역 회원들은 농협 내 금리조정위원회나 상호금융리스크관

리위원회 등을 통한 조합 참여의 폭을 넓혀내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대의원총회나 이사회를 통한 조합 경영 관련 정보공개의 폭을 넓혀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조건을 농민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확보해 낸 것이다. 또한 그만큼의 농민조합원들의 책임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이번 개혁 운동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4. 중앙연합회에 대한 요구사항

### (1) 중앙연합회의 통일된 운동 지침을 산하 연합회에 신속히 전달

이번 조사를 통해 회원들은 한농연중앙연합회의 통일된 운동 지침이 매우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역별로 농협 개혁운동이 제각기 진행되면서 조합장 및 임직원의 급여 조정이나 대출금리 인하 수준이 서로 상이하여 사후적으로 조정하는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드러났다.

### ● 농협별 정보 공개 및 조합원 참여 확대 관련 요구사항

농협별 구분	정보 공개 및 조합원 참여 확대 관련 요구사항
청도 산서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로마트 설계도면 제출 및 세부내용 공개</li> <li>○ 하나로마트 납품 및 농자재 구입, 청과물 공판장(서울) 선정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사회와 협의후 시행</li> <li>○ 각남농협과의 합병 관계 합의서 및 주유소 설치 관련 내용 공개</li> <li>○ 선거관리위원회 재설치, 이감사 선거 재실시</li> </ul>
청도 금천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 인하·급여 조정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농협 내에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li> </ul>
칠곡 가산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금융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4인(조합장 포함), 이사 2인, 조합원 2인(대의원총회서 선임)</li> </ul> </li> <li>○ 각종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조합 경영에 조합원 적극 참여</li> </ul>

관내 전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개혁운동이 진행될 청도군연합회의 경우, 각 읍면별 농협개혁 추진위원회 대표들과 각 농협의 대표들이 모여 지역별로 상이한 합의사항을 조정하고 있었다. 만약도 연합회나 중앙연합회가 농협 개혁운동의 추진 현황을 재빨리 파악하여 관련 지침을 신속히 전달해 줬더라면, 각 읍면들의 시행착오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회원들은 한결같이 내놓았다.

### (2) 경북 지역 농협 개혁운동 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정보 공유

또한 회원들은 경북 지역의 농협 개혁운동 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하여, 타 지역의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원들은 향후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어질 농협 조합장과 이감사 선거 과정 속에서, 농협의 잘못된 경영 관행을 고치고 농민조합원들의 정보 공유와 민주적인 농협 운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3) 농협중앙회의 지침·규정집과 예결산 상세 부속명세서의 공개 의무화

일선 회원들은 농협중앙회의 관련 정관 및 규정 등의 최신 자료를 지역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중앙연합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협법 및 중앙회와 지역농축협들의 정관들은 농림부 홈페이지나 각종 책자를 통해서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각종 업무에 관한 세부 규정들은 그 내용이 방대할뿐더러 입수 자체도 매우 어려웠다고 회원들은 고충을 털어놓았다. 농협중앙회가 수시로 지역농축협에 전달하

는 지침과 규정집들의 내용을 직원들이 제때 알려주지 않아 대의원은 물론 이감사마저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특히 임직원 급여 및 금리 조정 등에 관련된 핵심 내용에 관한 문건들은 농민조합원들의 집요한 노력을 통해서야 입수할 수 있었다.

기초적인 정보 공개마저 기피하는 농협의 태도에 대한 농민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고 농협 경영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농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조합의 건설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농협 임직원들의 자세 전환이 시급하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의 관련 규정을 농민조합원들이 편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알기 쉽게 내용을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농연중앙연합회의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4) 불합리한 급여 체계 개선을 위한 중앙 차원의 운동 전개

또한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합리한 회원농축협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앙연합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회원들은 주문하였다. 물론 각 지역 농축협별로 상황에 맞는 급여 수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고비용-저효율 농협 구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급여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연합회 차원의 제도 개선 촉구 및 관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향후 제17대 국회 개원을 전후로 농협법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혁을 위한 논의와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이같은 일선 회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5. 경북 지역 농협 개혁운동의 의의와 전망

### (1) 조합원 주도의 민주적 투명 농협 경영의 단초 마련

이번 경북 지역 농협 개혁운동을 통해 무책임하고 방만한 그간의 농협 경영 관행에 실질적인 제동이 걸린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간 장막에 가려있던 잘못된 농업 경영의 문제점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는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 민간 농업연구소들이 추진해 온 협동조합 교육과 농협 조합장·이사·대의원 진출 운동이 빚어낸 소중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간 농협의 각종 사업과 경영 시스템에서 수동적인 역할만 담당하며 소외받아 왔던 농민조합원들은 지역 농축협 개혁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농협 개혁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서명을 받는 등 결집된 역량을 발휘하는 데 성공했다. 복잡한 농협 내부 지침 및 문서를 입수하여, 임직원 급여·경영·회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역량있는 농민들이 적극 참여했다. 또한 인근 지역 농협의 성공 사례와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협상 과정에서 원칙을 견지하며 유연하게 대처했던 것도 농협 개혁운동의 성공적 마무리를 이끌어 낸 요인이다.

이번 농협 개혁운동을 통해 조합원들은, 스스로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서야 농협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교훈과 희망을 얻어냈다. 이를 통해 농민조합원들은 농협 사업 및 경영에 대한 참여 공간을 넓혀낼 수 있었고, 향후 경제사업 활성화

등 근본적인 농협 체질 개선을 위한 소중한 경험과 에너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 (2) 경제사업 중심의 근본적인 농협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관성화된 농협 임직원들이 실제 농민조합원의 숙원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농민들의 계획 제안 및 일관성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 내 핵심 작목의 판매 활성화를 목표로 할 경우, 경제사업 조직 체계를 핵심 작목 지원 위주의 팀체로 개편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농협 외부의 유통 전문가를 계약 연봉제로 특별 채용하여, 농협 경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전상무 산하에 지도부·판매부·신용부·공제부·생활물자부·구매자재부 등으로 단순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업무분장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작목별 지원팀 내에 다수의 직원들을 배치하여 전담시키는 방안을 관철시키는 형태로 바뀌는 것도 중요한 농협 개혁 과제 중 하나이다.

임직원 급여 조정 등으로 생긴 농협 내 잉여 재원은, 농축산물 가격 하락시 조합원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준비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농협 계통을 통한 농축산물 출하시 농민조합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적립하여, 인근 농협과 공동으로 농축산물 가공 시설을 만들 자본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같이 건설적인 대안을 농협측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농협 개혁의 주도권을 농민조합원들이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향후 농협 개혁운동 전개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 과제 합의·실천 운동』을 농민조

합원이 주도하여 농협 임직원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농연은 2003년 농협 개혁운동 지침을 통해 이같은 『농협 개혁 과제 합의·실천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을 각 지역 연합회에 요청하였으며,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각 지역의 농축협을 농민조합원의 손으로 개혁하고 체질을 개선시켜,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키워내야 한다.

### (3)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

이번 농협 개혁운동을 계기로, 농협의 민주적인 건전 경영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민조합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접근이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 농업의 회생을 위한 농협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야말로 농협 개혁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물론 현재 농협 개혁운동에 있어 임직원의 불합리한 급여 체계 개선과 대출금리 인하는 피할 수 없는 최우선적인 과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외국산 농축산물과의 극심한 경쟁 속에서,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우수 농축산물을 제값에 가공·판매할 수 있는 농협으로 거듭나야만 한국 농업·농촌·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농협 계통 구판매 사업의 잘못된 관행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농민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한 문제제기와 대안 관철 또한 절실하다. 개별 농가들은 대도시 위탁상 등과의 친분 관계에 의존하여 일시적으로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소매유통업체 위주의 농축산물 유통 구조가 재편되고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근대적인 위탁상 중심의 유통체계가 무너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농협을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고, 책임 출하를 하지 못한 농민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혜택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니네들이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두고 보자!', '농협이 어찌되든 나하고는 상관 없다.'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로는 잘못된 농협 경영의 관행은 절대 타파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미 장천농협이나 파주 교하농협과 같은 극단적인 대립·갈등 속에서 농협 해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치달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나부터 참여하여 우리 농협을 고쳐야 한다!', '내 스스로가 우리 농협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만이 근본적인 농협 개혁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핵심 무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농협을 살려서 농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릴 수 있는 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 6. 나가며

이번 조사를 통해 경북 지역 한농연 회원들은 한결같이 농민조합원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야 할 농협을 해산시키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구미 장천농협이나 파주 교하농협의 사례를 통해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아닌, 농협과 농업의 회생을 위한 상생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말도 한결같이 내 놓았다. 농민조합원들의 슬기로운 농협 개혁운동 추진이 필요한 때다. 